

우리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경제인의 창



강혜정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에 스위스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명품시계, 알프스 설원 등이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번에 새삼 깨달은 스위스는 그 무엇보다도 농촌이 아름답고 농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초지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떼, 스위스 전통가옥 살레의 창밖에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꽃들, 가파른 산 위에도 한 폭의 그림같이 자리 잡은 농가와 목장 등은 그 자체가 힐링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위스 전원풍경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 정부 정책, 그리고 농업을 일구며 농촌을 가꾸는 농업인의 노력이 그 이면에 숨어 있었다. 스위스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역할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제공,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익적 직불제의 개념이다.

더 나아가 스위스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보호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 하였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제1항에는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본의무를 식량공급, 천연자원보존, 농촌경관 유지, 인구부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직불제를 농가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퍼주기식 특혜라는 여론의 눈총과 재정당국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소득지원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직불금 예산, 쌀 편중 지원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 발생, 공익적 기능 제고 목적 직불제의 낮은 비중, 농가간·품목간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의 논리에서 농업인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논리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책 명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는 연간 약 27조8천993억원으로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 이상의 가치를 매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농정의 목표는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러 직불제를 통합하고 공익의무를 실체화하여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안정성, 다기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업생산·가공·유통·소비 등 푸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목표를 공익적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공익적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가치 인식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안정적 식량공급, 환경·문화·생태·경관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같은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추석에도 우리 농업·농촌은 늘 그렇듯이 풍성한 제철농산물과 황금빛 들녘의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농촌다움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땅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교단칼럼



김지선
무등중학교 교사

황에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인지 마음이 착잡해졌다.

지난 몇 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포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재작년엔 포항지진, 작년 여름만 해도 습 막히는 폭염으로 힘들었고, 올해 초에는 강원도 산불과 특히 미세먼지로 습막힐 것 같은 몇 달을 살았다.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 도리안 소식이나 꺼지지 않는 아마존 산불, 간간히 들리는 일본의 지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구촌 자연재해 소식들이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연재해 종류만 해도 14가지가 넘는 상황인데, 이렇게 모아 놓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정해진 수명대로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 앞설 뿐이다. 그런데 이런 공포심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찾아진 자연재해로 인한 자연스러운 심리일까?

‘공포심은 신념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은 공포심이 얼마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불안, 위기의식, 공포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거기에 언론은 마치 술가락을 얹듯이 더욱 스펙터클하게 공포의 현장을 간접 체험시켜 주고 있다. 학교 현장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도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핵심은 예방, 대책, 위기상황 대응법, 복구와 해결책을 교육하

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공포심과 긴장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간혹 우려가 되기도 한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만 진지한 접근이 없는 가상훈련은 맥빠진 상황극이 되기 일쑤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포와 긴장에 무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화산, 황폐만을 남기고 지나가는 태풍, 격한 파도가 치솟는 끝없는 대양, 그리고 광포하게 흘러내리는 높은 폭포와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저항 능력이 이런 것들의 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나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다면, 그 광경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만큼 더 매력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들을 가까이 숭고하다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정신력을 고양시켜 주며, 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주는 저항능력을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판단력비판’에 나오는 ‘숭고미’에 대한 설명이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심리이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위력 앞에 단순히 공포심으로 위축되었다면 인류역사의 찬란한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이기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그 앞에서 자신을 견주어 보는 용기와 저항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재해가 주는 진정한 가르침일 것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어서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

음주운전 근절,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약속

추석 연휴기간 고단한 삶에서 잠시 떠나 고향에 있는 가족과 명절 때만 만날 수 있는 지인들을 보면 술잔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술자리 이후 분위기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평소 주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 교통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 이어 2018년에도 3천781명으로 404명이 감소했

다.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해에 4만명에 이르러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중 564명 가량은 목숨을 잃는다. 자동차 1만 대당 혹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법규를 위반한 본인은 물론 선량한 상대 운전자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가법계 여기는 안전 불감증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음주 교통사고는 즐

거위야 할 명절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드는 주범일 뿐 아니라 본인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선량한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방심하는 순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행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하7명 (담당경찰서 중앙파출소)

사설

지역 유권자, 내년 총선서 현역 교체를 바란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절반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일보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닷컴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분석이다.

한국갤럽에 의뢰(지난 5·6일 광주·전남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 대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에 ‘잘했다’는 응답자는 53.7%인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자는 27.5%였다. 역할 수행의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현역들의 재당선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7.3%에 그쳤다. 53.5%가 다른 인물이 당선되기를 희망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인물 교체론’이다.

현역 의원들의 교체 의견을 피력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호남 정치의 분열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현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떨어지면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고 대변하는 역할이 부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같은 호남 정

치의 현실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내년 총선에서 표표써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전남의 정치 지형은 잇단 분당 사태로 지리멸렬해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에서 몰표를 얻었던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진데 이어 민주당은 다시 내분으로 분당 사태를 맞았다. 연이은 분당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호남 정치가 실종돼 견전한 야당으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며 호남발전을 견인하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軍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현안과 관련해서 그렇다. 이들 현안에 지역민의 의견을 두루 모아 합리적·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호남 정치의 실종, 정치력 부재 상태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내비친 지역 유권자들의 속내는 내년 총선에서의 판단과 관련된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 긍정평가와 달리 인물 교체론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택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던 한달 만이다. 장관 임명장 수여까지 지난 한달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드는 격랑의 시간이었다.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논란은 격한 충돌로 비화했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더욱 급격한 대전세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경 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 그만큼 향후 정국의 추이는 불투명해지고 폭발성을 안게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철회한다면 이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고 촛불의 뜻인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률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못지않게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기된 각종 의혹보다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향한 정면 돌파 의지라는 이야기다.

그렇더라도 조국 사태로 벌어진 이번 격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노정시켰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반발은 기회에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온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한 오점은 상처가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절망하는 세대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러 반대를 무릅쓰는 조국 임명은 대표적 권력 기관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사회 전반에 변혁의 회오리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검찰은 드러난 문제에 수사를 계속하고, 신임 법무 장관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 시대의 과제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대통령이 고뇌 끝에 내린 결단과 직결된다.

조국과 입시제도

얼마 전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우리 대학입시와 사교육의 현주소, 나아가 서울 강남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태도와 대응 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준 드라마였다.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의혹이 우리 사회를 한 달여간 뒤흔들었다. 인턴, 논문 필자 등재, 봉사활동 등... 알듯 모를듯 여러가지 입시 제도가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싸고 쟁점이 됐다. 상당수 국민은 불평등에 한탄했고 일부는 분노했다. 또 일부는 능력 부족을 탓했다.

결국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 장관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공부하지 않은 집안에 준수한 외모, 서울대 교수를 할 정도의 뛰어난 머리, 그리고 사회 정의와 개혁을 외치는 데 앞장서는 용기 있는 지식인... 이른바 ‘강남 좌파’다.

그런 그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을 다니는 딸까지 두었다. 상대·공대가 주목받던 시대를 넘어 얼마 전부터 의대생은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부러운 존재에게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다. 의혹 내용은 영향력 있는 아빠·엄마가 딸을 상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영향력과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조 장관의 양식을 믿는다. 그런데도 찻짬하다. 아바 강남의 수많은 권·재력가들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뭘 벌일이라고” 하면서 웃음지도 모른다. 그 사회에선 다반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모의 권·재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시 제도에 있다. 획일적 시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오늘의 입시제도는 그 가짓수가 수천개란다. 그 방법을 연구하는 입시컨설턴트만 있을 정도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중학교 때부터 이리저리 바늘구멍을 찾아 좋은 대학을 보내는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대응 가능한 더욱 복잡한 제도를 원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이제 어려워졌다.

학력고사 시대가 그립다. 돈·권력·정보 등 아무 것도 소용없이 오로지 시험성적만으로 평가 받고 대학에 갔으면 한다. 창의성과 다양한 인재 등 너무나 좋은 말이다. 그러나 모두 있는 자의 바늘구멍일 뿐이다.

백경원 정치부장 jkpark@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준 | 주필 김영태 |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 정치부 (062)606-7730 | 경제부 (062)606-7713 | 사회부 (062)606-7722 |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 사진부 (062)606-7762 | 뉴미디어부 (062)606-7760 | 서울지사 (02)313-1182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제보 062-606-772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 뉴시스**가 함께 만듭니다